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하는 평창올림픽

Online Series

2017. 10. 18. | CO 17-29

이우태(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 이라고 밝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대회 참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을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올림픽과 평화

1892년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당시 유럽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올림픽 재건을 주창했다. 1925년 제정된 올림픽 헌장에서는 "올림픽운동의 목적은 올림픽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스포츠를 통해 평화롭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에 공헌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대제전’으로 ‘평화로운 세계’ 건설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올림픽 정신은 정치적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지켜지지 못했던 사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이 올림픽 선수촌에 난입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하였고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보복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또한 냉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이 대회에 불참했고 1984년 LA올림픽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들이 모스크바 올림픽의 보복 조치로 대회를 보이콧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이 위의 사례들처럼 정치적 희생물이 된 것만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만큼은 전쟁 중인 지역에서도 휴전을 하도록 하는 ‘올림픽 휴전(Olympic Truce)’을 통해 올림픽의 목표인 ‘세계평화의 기여’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3년 IOC는 184개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휴전’에 관한 건의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 총회는 IOC가 제안한 ‘올림픽 휴전’이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고 ‘올림픽 휴전에 관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하였고 이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마다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림픽 정신은 세계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올림픽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달성하거나 국가 간 반목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대회 자체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는 상황이다. 현재 휴전상태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있는 한반도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계기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정부의 대북정책 무게추가 제재와 압박에 실려 있으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스포츠 분야를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평창올림픽을 그 모멘텀으로 삼으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며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월 독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8.15 경축사에서는 “평창올림픽은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남북 대화의 기회로 삼아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지금은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평화올림픽을 향한 노력

평창올림픽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이자 넓게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 기여를 강조하는 올림픽 정신의 실현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은 북한의 올림픽 참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참가여부는 불투명하고 장웅 북한 IOC위원은 올림픽 참가에 대해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 당시 장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단일팀 제안에 대해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기어가고 있는 형편에서 단일팀을 한다는 말 자체가 우습다”라고 일축하며 “북남관계를 정치가 우선되기 전에 체육으로서 풀다는 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고 기대가 지난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월 16일 IOC매체인 IOC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 문제라고 확신

한다”며 “평창올림픽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으나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북한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해 결국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북한 최고 리더십의 결정 사항이며 현재까지는 참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암시하였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견주 해야 할까?

첫째, 북한이 평창에 올 수 있는 여건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종목 별 대회 출전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난 9월 28일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부분에서 출전권을 획득함으로써 올림픽 참가의 가능성을 높였으나 단순히 한 종목 출전을 위해 북한이 평창에 올 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선수단 규모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종목 별 와일드카드 출전권과 번외경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미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은 IOC의 협조를 얻어 와일드카드 출전권을 획득하여 올림픽에 참가한 전례가 있다. 또한 하계올림픽에서는 국제 평화의 상징성이 있는 선수들을 번외경기에 출전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와일드카드와 번외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OC와 개별 종목 국제연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스포츠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의 선수단 참가 이외에 올림픽 개회식에 북한의 문화 공연을 추진도 고려해볼만 하다. 물론 북한의 공연이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남북 간의 조정절차를 걸쳐 최대한 정치색이 얇은 수준에서 북한의 문화 공연을 진행된다면 ‘평화올림픽’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평창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3월에도 개최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은 2016년 11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면서 장애인분야의 국제교류에 부쩍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북한은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인 권리 담당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북한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확인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북한은 10월 1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평창패럴림픽 참가서를 제출하였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패럴림픽을 충분히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고 한국의 장애인체육계 인사가 IPC 관계자와 함께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해 볼만하다.

셋째,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므로 올림픽 이후의 구체적인 남북체육교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이든 폐럴림픽이든 북한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이후의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림픽의 성과는 그야말로 일회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림픽 이후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분야에서 북한과 광범위한 접촉을 시도하여야 하며 단기성 사업과 중장기성 사업을 구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고 해도 이것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결정할 경우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일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은 핵대로 개발하고 올림픽 참가는 핵문제와는 별개로 추진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당시 불신과 반목을 거듭하던 동서 양진영이 모두 참가하여 양 진영의 화해를 이끌고 결국 냉전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개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0년이 지난 2018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평창올림픽은 1988년에 이루지 못했던 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최고조에 달해있고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꽉 막혀 있는 지금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파랑새’가 되도록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KINU 2017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